



산업통상자원부

보도자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배포시	배포 일시	2022. 12. 26.(월) 14:00
-------	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

담당 부서	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	책임자	과 장 조수정	044-203-5620
		담당자	사무관 형건우	044-203-5628

「제231차 대외경제장관회의」 개최

□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'22.12.26.(월) 14:00 정부서울청사에서 「제231차 대외경제장관회의」를 주재하였음

* 참석자 : 경제부총리(주재), 과기부·외교부·산업부·환경부·해수부·중기부·국조실 등 관계부처 장·차관

□ 금일 회의에서는

- ① EU 탄소국경조정제도(CBAM) 현황 및 대응 방안
 - ② EU 핵심 원자재법(CRMA) 입법 동향 및 대응 방향
 - ③ EU 역외보조금 입법 동향 및 대응 방향
- 안건을 논의·의결하였음

- ※ [붙임] 1. 부총리 모두 발언
- 2.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

※ [별첨] EU 탄소국경조정제도(CBAM) 현황 및 대응 방안



제231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부총리 모두발언(12.26)

□ 지금부터 제231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
[대외경제 여건 및 대응]

□ 올 한해를 돌이켜보면, 주요국의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 움직임, 통화 긴축기조로의 전환 등과 함께,

-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 충격으로 대외發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았던, 매우 어렵고 엄중한 한 해였습니다.

□ 내년에도 당분간 대외경제 여건은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

- 특히, 주요국의 경기위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,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의 실체가 더욱 뚜렷해지며 우리 경제와 산업에 실질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.

□ 이에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, 여러 대외 불확실성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.

- 美 인플레이션감축법(IRA)의 경우, 내년에도 美 정부 협의, 의회 아웃리치를 지속하는 한편, 우리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습니다.
- 최근 EU도 기후변화 및 공급망 대응 등을 위해 자국 중심의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어, 우리 경제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

[① EU 탄소국경조정제도(CBAM) 현황 및 대응방안]

- 먼저, 이번 달 발표된 'EU 탄소국경조정제도(CBAM)'는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관련 산업 영향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인 바,
 - 정부는 향후 EU 이행법령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는 한편, 국내적으로는 영향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.
 - 특히, 對EU 수출량이 많은 철강 업종과 투입재 탄소 배출이 많은 알루미늄 업종, 그리고 대응역량이 약한 중소 수출 기업 등에 대한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.
 - 내년 10월 시작되는 전환기간 중에는 탄소배출량 보고의무를 기업들이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 측정·검인증 비용 지원 및 간이 MRV* 시스템 개발에 중점을 두는 한편,
 - * MRV: 탄소배출량의 측정(Measurement), 보고(Reporting), 검·인증(Verification) 체계
 - '26년 법 시행 및 '34년 전면 유상할당 개시에 대비하여 탄소저감 기술개발 지원 및 녹색금융 확대 등으로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.

[② EU 핵심 원자재법(CRMA) 입법 동향 및 대응 방향]

- 또한, EU는 역내 핵심 원자재 공급망의 다변화 등을 담은 핵심 원자재법 초안을 내년 1분기에 발표할 예정입니다.
- 아직 기본 입법 방향* 외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, 현재로서는 국내 산업계 영향 등 상세 분석에 한계가 있지만, 초기부터 적극적인 협의와 대응이 필요합니다.

* ①핵심 원자재 우선순위 및 목표 설정, ②수급 모니터링 및 위험 관리, ③기금 조성 등 공급망 강화, ④전략 비축 등 지속 가능 경쟁여건 형성

- 정부는 핵심 원자재법이 WTO 등 국제 규범과 합치됨은 물론, 우리 기업에 부당한 차별로 작용하지 않도록, EU와 입법과정에서부터 선제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한편,
- 관계부처,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·운영하여 대응전략을 신속하게 수립해 나가겠습니다.

[③ EU 역외보조금 입법 동향 및 대응 방향]

- 마지막으로 EU는 공정경쟁을 위해 역외보조금 규제법안을 지난달 마련하였으며, '23년 중반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.
- 동 법은 역외보조금 수령 기업의 EU 내 기업결합이나 공공조달 참여로 역내시장 왜곡 효과가 클 경우, 사전신고 의무 부과, 시정·제재조치*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* 기업이 역외보조금 신고의무 등에 비협조적일 경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
- 이로 인해, 우리 기업의 對EU 진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EU측에 공정한 가이드라인 설계를 요구하는 한편, 국내 영향 분석, 교육·홍보 등 관련 대책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.
- 이상으로 모두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
붙임 2**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**

◇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,
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안건	담당부서		담당과장	담당자
EU 탄소국경 조정제도(CBAM) 현황 및 대응방안	기획재정부	대외경제국 통상조정과	이재완 과장 (044-215-7650)	강수진 사무관 (044-215-7652)
	산업통상자원부	통상법무정책관 통상법무기획과	고상미 과장 (044-203-5620)	김혜림 사무관 (044-203-4879) 이창우 사무관 (044-203-4878)